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박병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실 조사연구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박병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실 조사연구팀

bjpark@seoulshinbo.co.kr

I. 조사의 개요

II.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III.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IV.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V. 요약 및 정책제언

I. 조사의 개요

“서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의견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절대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약 312만개), 총고용의 86.8%(1,226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및 각종 정책기관이 앞 다투어 내어놓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좀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 이유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말하는 현장의견과 정책요구를 좀 더 세심히 파악하지 못하여서는 아닐까?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등이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의 현황과 경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인식과 이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일에 활용하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서울시의 현장중심 시책수립, 재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향 모색 등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지난 4월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¹⁾

<표 1>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FAX, E-Mail 등을 보완 활용)
분석단위	3개 기업규모, 7개 업종, 4개 권역으로 구분
조사항목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서울지역 정책금융 운용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1) 2013년 상반기 현재, 약 19.1만개의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각종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 약 1,2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모여 '서울기업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본 조사에 이들 회원사 251개 업체가 참여 하였다.

II.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1. 정부의 정책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올해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내어놓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전반적 기조(基調)에 대한 설문에 응답 기업의 8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기업 및 소기업 규모와 건설 및 제조업 영위 업체, 서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반면, 소상공인, 서비스 또는 도소매업 영위, 중부 및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 정부의 정책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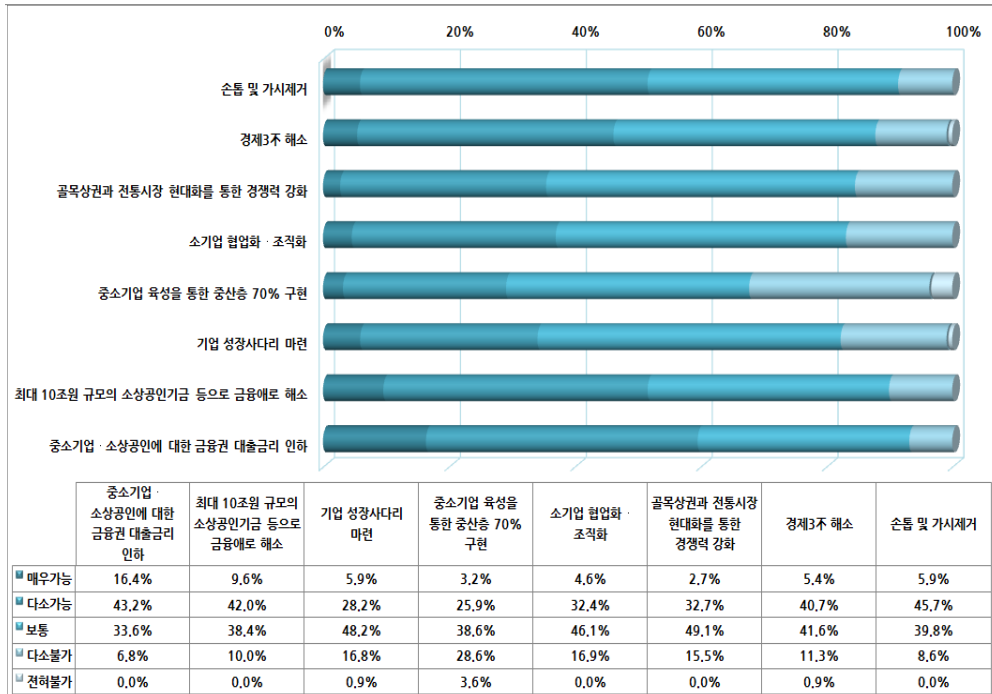
구 분	정책방향과 기조(基調)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전 체	89.1	10.9	84.3	15.7	
기업 규모	중기업	89.7	10.3	89.7	10.3
	소기업	93.2	6.8	85.1	14.9
	소상공인	85.4	14.6	81.7	18.3
업 종	도소매	87.7	12.3	83.2	16.8
	서비스	84.2	15.8	86.8	13.2
	제조	92.2	7.8	82.0	18.0
	건설	90.9	9.1	81.8	18.2
	운수	100.0	0.0	100.0	0.0
	음식숙박	100.0	0.0	100.0	0.0
	기타	100.0	0.0	100.0	0.0
권역	중부	85.5	14.5	78.7	21.3
	동부	89.9	10.1	83.5	16.5
	서부	95.7	4.3	87.2	12.8
	남부	85.7	14.3	90.7	9.3

2) 지면 관계상 3개 기업규모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7개 업종별(도소매, 서비스 제조, 건설, 운수, 음식숙박, 기타), 4개 권역별(중부, 동부, 서부, 남부)로 조사된 모든 통계치를 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제시가 가능하며, 이어지는 조사결과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하 동일하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창조경제 정책마련’ 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4.3%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전략에 대한 큰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중기업 89.7% > 소기업 85.1% > 소상공인 81.7%)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운영의 체계를 갖춘 수준에서 ‘창조경제’ 와 관련한 정책혜택을 실제로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2. 5년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실행 성과에 대한 예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정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관련 정책이 꼽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각 항목별 성과 실현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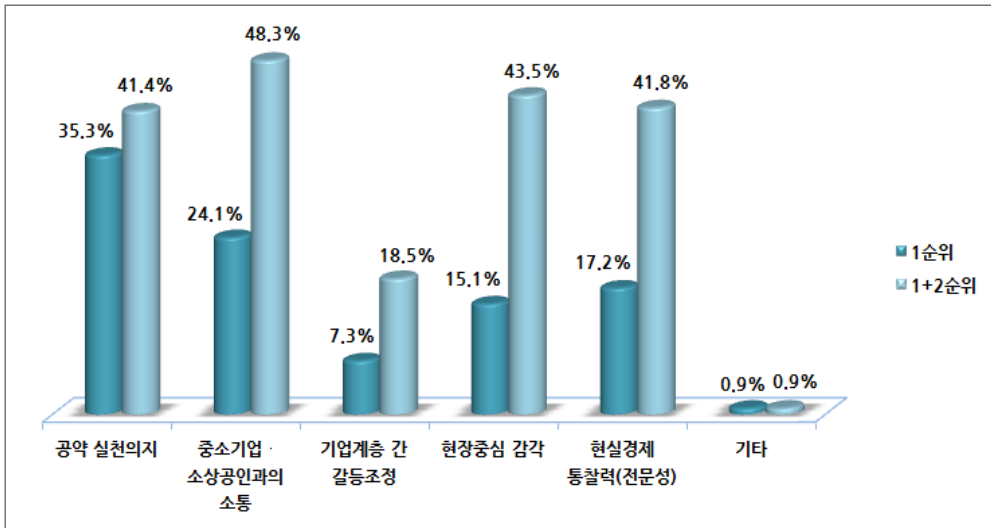
[그림 1] 5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실행 성과에 대한 예상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70% 구현’ 이 향후 5년 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10개 중 3개 기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부문과 관련된 정책(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자금 등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들(손톱 밀 가시제거, 경제 3不 해소 등)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공약실천 의지(35.3%, 이하 1순위 기준)’ 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소통(24.1%)’, ‘현실경제에 대한 통찰력·전문성(17.2%)’, ‘현장중심 감각(15.1%)’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 규모(33.3%), 남부지역 사업체(32.6%)는 공약실천 의지 보다 ‘소통’ 이 현재시점에 더욱 필요한 리더십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타업종의 경우 ‘기업 계층(대·중·소·소상공인) 간 갈등조정 능력(40.0%)’ 을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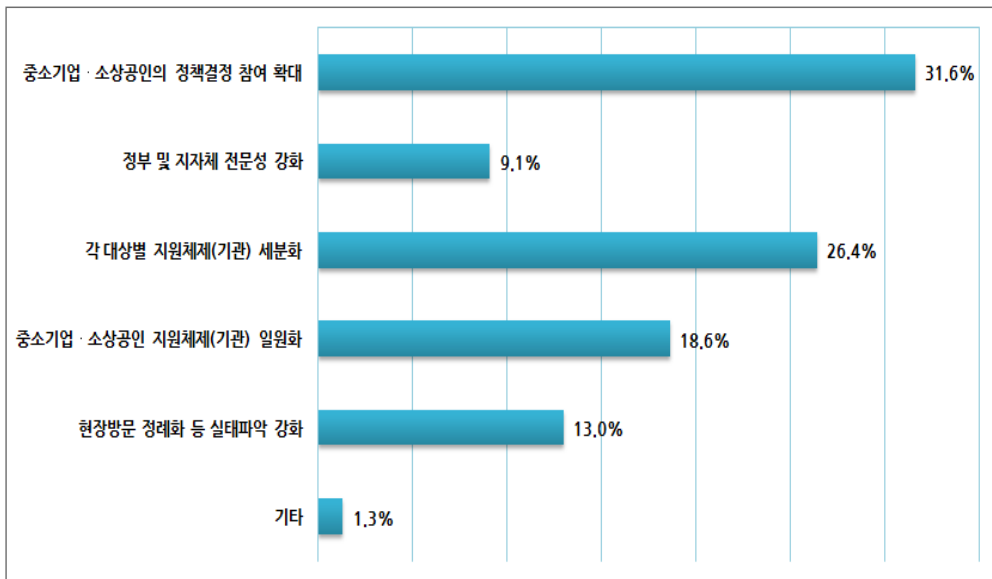


[그림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4.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방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정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6.1%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확대’를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반적으로 일원화 체제의 통합지원 방식 보다는 각 대상별(중·소·소상공인) ‘지원체제(기관) 세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소매업(29.2%), 건설업(34.8%) 영위 업종과 중부지역(27.4%)에 위치한 사업체 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조업(23.5%) 및 음식숙박업(28.6%)과 남부지역(23.8%) 사업체의 경우 지원체제 세분화 보다는 ‘일원화 된 통합지원 체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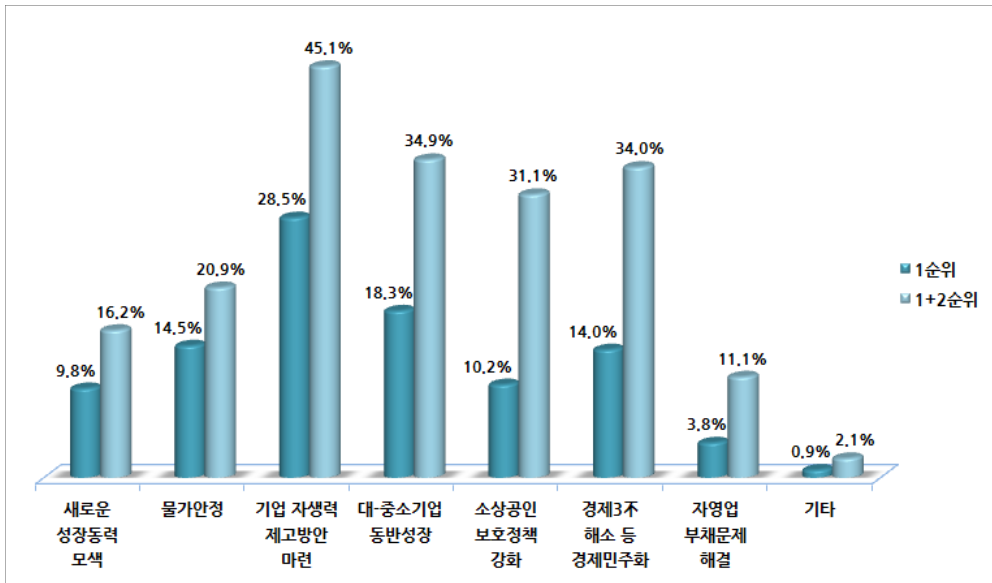


[그림 3]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방법

5.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25.8%(이하, 1순위 기준)가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 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8.3%)’, ‘물가안정(14.5%)’, ‘경제3不 해소 등 경제민주화 추진(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업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 이 최우선 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는데, 특히 음식숙박업(42.9%)의 해당항목 선택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중기업 45.0% > 소기업 30.0% > 소상공인 21.0%)’ 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정책 강화(소상공인 16.2% > 소기업 6.7% > 중기업 2.5%)’ 는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체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장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先 보호책 마련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Ⅲ.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1. 경영상황 : 매출 및 채산성

조사시점에 즈음한 응답기업의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순이익 및 이에 대한 최근 6개월간의 변화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들의 영업실적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조사기업의 41.9%가 최근 6개월 前과 비교하여 ‘감소했다’ 라고 답하였다. 특히 음식숙박업(71.4%)과 도소매업(46.4%)의 매출액 감소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형·자영업 부문이 경기불황으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부지역(54.8%) 및 남부지역(44.2%)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음식점 및 각종 도소매업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3> 최근의 매출액 증감 여부

(단위 : %)

구 분		증 가	비 슷	감 소
전 체		16.9	41.2	41.9
기업 규모	중기업	25.0	32.5	42.5
	소기업	20.0	42.2	37.8
	소상공인	11.3	43.4	45.3
업종	도소매	20.0	33.6	46.4
	서비스	9.8	46.3	43.9
	제조	22.4	42.9	34.7
	건설	8.7	56.5	34.8
	운수	0.0	100.0	0.0
	음식숙박	0.0	28.6	71.4
	기타	20.0	80.0	0.0
권역	중부	11.3	33.9	54.8
	동부	16.3	42.5	41.3
	서부	23.5	51.0	25.5
	남부	18.6	37.2	44.2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순이익 변화로 파악한 채산성 역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비율(41.9%) 보다 더 높은 수치로 순이익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최근의 순이익 증감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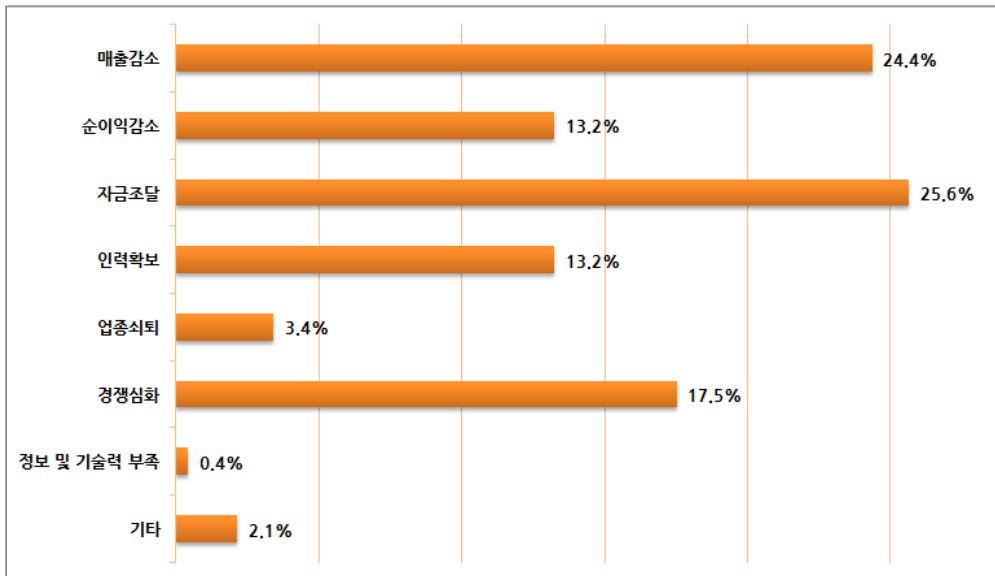
구 분		증 가	비 슷	감 소
전 체		14.2	28.4	57.3
기업 규모	중기업	20.0	25.0	55.0
	소기업	15.5	26.2	58.3
	소상공인	10.9	31.7	57.4
업종	도소매	18.3	22.1	59.6
	서비스	7.7	35.9	56.4
	제조	19.1	29.8	51.1
	건설	0.0	31.8	68.2
	운수	0.0	100.0	0.0
	음식숙박	0.0	28.6	71.4
	기타	20.0	60.0	20.0
권역	중부	12.1	22.4	65.5
	동부	14.1	29.5	56.4
	서부	17.4	37.0	45.7
	남부	14.0	25.6	60.5

업종별로는 생활형·자영업 부문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숙박업(71.4%) 및 도소매업(59.6%)의 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은 건설업(68.2%)의 채산성 악화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비용 증가’, ‘출혈경쟁 심화’ 및 ‘대기업의 동종업계 진출’ 등이 꼽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문제의 원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 보다는 거시경제 또는 경영환경과 관련된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최근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25.6%)’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의 경우, 중소기업(32.5%) > 소기업(29.2%) > 소상공인(20.0%)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필요자금 조달에 애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반되는 각종 운영자금의 규모도 동시에 커지나, 그 수준에 맞는 내부 또는 외부 자금조달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5] 최근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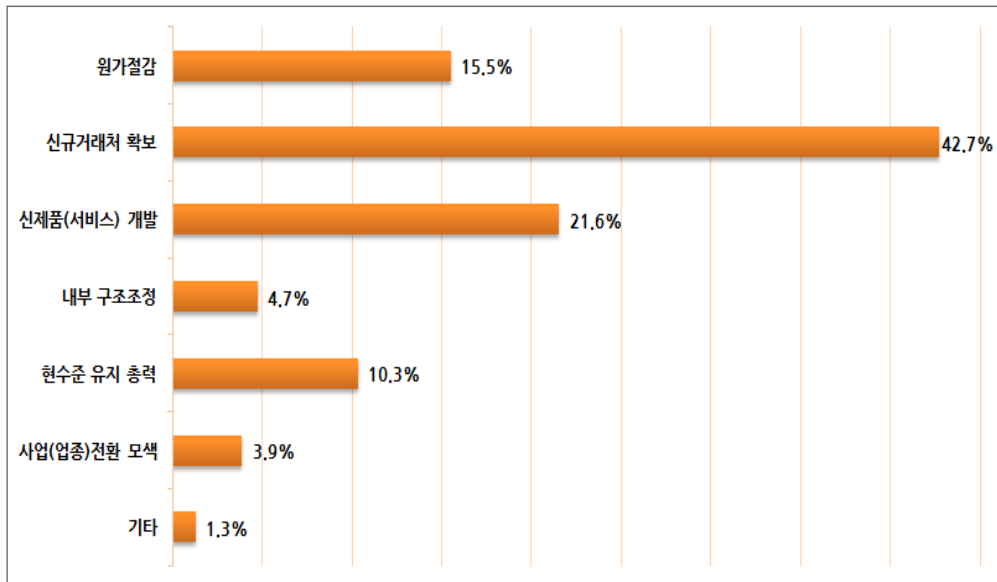
한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는 소상공인(26.7%) > 소기업(24.7%) > 중소기업(17.5%) 순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른 경영애로는 소규모·영세 사업체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 사항별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기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보다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애로 사항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조사대상 기업의 96.2%는 최근의 대내외적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폐업 또는 (재)취업 후 근로소득자 등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또한, ‘사업(업종)전환’을 경영자 구책으로 선택한 비율도 전체의 3.9% 수준에 불과해, 어떻게 해서든 현 사업체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전(全) 업종이 ‘신규거래처 확보(42.7%)’를 통한 경영애로 극복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23.1%)과 음식숙박업(42.9%)은 ‘현 수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14.3%)의 경우 ‘사업(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의 자구책 마련이 가장 쉽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28.2%)이 ‘신제품(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소기업(47.2%)·소상공인(45.2%)은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IV.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1. 신용보증 지원 후 변화 : 매출액 및 고용수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후 매출액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1%가 ‘증가’ 하였다고 답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중기업 76.9% > 소기업 70.1% > 소상공인 69.7%) 매출증가에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소상공인 12.8% > 소기업 8.0% > 중기업 5.1%) 매출액 감소로 응답한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82.6%) > 도소매업(74.5%) > 제조업(67.3%) > 음식숙박업(66.7%) 순으로 매출액 증가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39.0%는 신용보증 이용 전후의 매출액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 신용보증 지원 후 매출액 변화

(단위 : %)

구 분		대폭증가	소폭증가	증가	변동 없음	소폭감소	대폭감소	감소
		전 체	8.9	62.1	71.1	19.1	8.5	1.3
기업 규모	중기업	23.1	53.8	76.9	17.9	2.6	2.6	5.1
	소기업	8.0	62.1	70.1	21.8	6.9	1.1	8.0
	소상공인	4.6	65.1	69.7	17.4	11.9	0.9	12.8
업종	도소매	11.8	62.7	74.5	13.6	10.9	0.9	11.8
	서비스	2.4	58.5	61.0	26.8	9.8	2.4	12.2
	제조	10.2	57.1	67.3	24.5	6.1	2.0	8.2
	건설	4.3	78.3	82.6	13.0	4.3	0.0	4.3
	운수	0.0	100.0	0.0	0.0	0.0	0.0	0.0
	음식숙박	0.0	66.7	66.7	33.3	0.0	0.0	0.0
	기타	20.0	40.0	60.0	40.0	0.0	0.0	0.0
권역	중부	6.8	59.3	66.1	25.4	8.5	0.0	8.5
	동부	11.3	56.3	67.5	17.5	13.8	1.3	15.0
	서부	9.4	75.5	84.9	11.3	3.8	0.0	3.8
	남부	7.0	60.5	67.4	23.3	4.7	4.7	9.3

신용보증 이용 후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47.5%가 상시종업원 증가에 답하였고, 47.9%는 변동 없음, 4.7%는 감소로 응답하였다. 상시종업원 수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업체를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기업 71.8% > 소기업 56.8% > 소상공인 31.2%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고용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기업(38.5%)에서 3명 이상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진 것이 주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신규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에 사용되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에 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100%), 음식숙박업(57.1%) 및 건설업(52.2%)의 상시종업원 수 증가 비중이 높았는데, 위 업종이 전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띄고 있음을 생각할 때 신용보증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신규 인력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에 상당부분 충당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거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생각할 때, 신용보증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표 6> 신용보증 지원 후 고용 변화

(단위 : %)

구 분		3명 이상	2명	1명	증가	변동없음	감소
전 체		12.3	14.4	20.8	47.5	47.9	4.7
기업 규모	중기업	38.5	15.4	17.9	71.8	25.6	2.6
	소기업	13.6	21.6	21.6	56.8	37.5	5.7
	소상공인	1.8	8.3	21.1	31.2	64.2	4.6
업종	도소매	10.9	14.5	21.8	47.3	48.2	4.5
	서비스	9.8	7.3	24.4	41.5	53.7	4.9
	제조	14.3	26.5	8.2	49.0	46.9	4.1
	건설	17.4	0.0	34.8	52.2	43.5	4.3
	운수	0.0	100.0	0.0	100.0	0.0	0.0
	음식숙박	14.3	14.3	28.6	57.1	42.9	0.0
	기타	20.0	0.0	20.0	40.0	40.0	20.0
권역	중부	15.0	8.3	20.0	43.3	48.3	8.3
	동부	10.0	15.0	20.0	45.0	50.0	5.0
	서부	18.9	17.0	24.5	60.4	39.6	0.0
	남부	4.7	18.6	18.6	41.9	53.5	4.7

2.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

신용보증 이용이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의 부도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조사기업의 86.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업 90.0% > 소기업 88.9% > 소상공인 82.6% 순으로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업종에 걸쳐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운수업 및 음식숙박업과 서부지역에 위치한 사업체가 ‘매우 도움된다’ 라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제조업 및 기타업종이 ‘보통’ 또는 ‘도움 안됨’ 으로 느끼는 비중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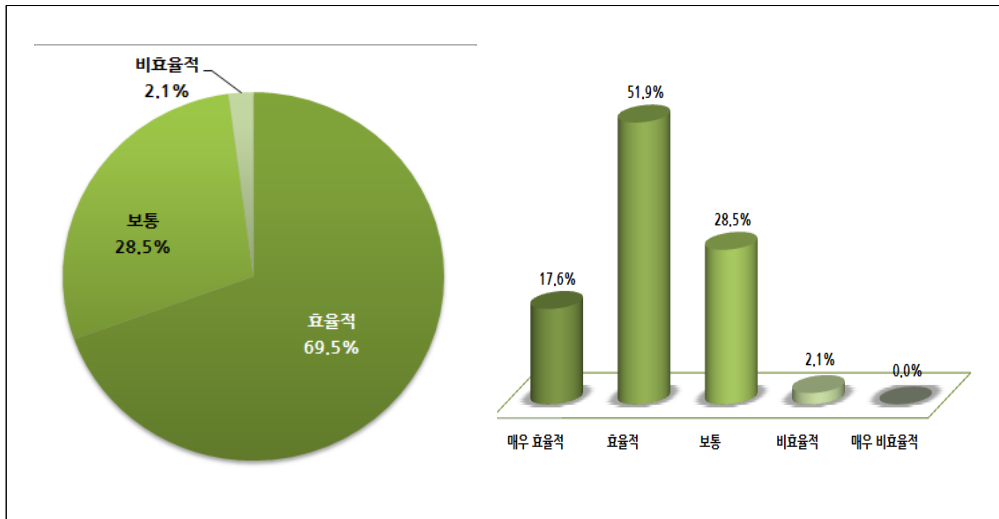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매우 도움됨	다소 도움됨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전 체		46.9	39.3	86.2	10.9	2.5	0.4	2.9
기업 규모	중기업	57.5	32.5	90.0	5.0	2.5	2.5	5.0
	소기업	50.0	38.9	88.9	7.8	3.3	0.0	3.3
	소상공인	40.4	42.2	82.6	15.6	1.8	0.0	1.8
업종	도소매	47.3	39.1	86.4	10.9	2.7	0.0	2.7
	서비스	54.8	35.7	90.5	7.1	0.0	2.4	2.4
	제조	41.2	39.2	80.4	15.7	3.9	0.0	3.9
	건설	43.5	52.2	95.7	4.3	0.0	0.0	0.0
	운수	100.0	0.0	100.0	0.0	0.0	0.0	0.0
	음식숙박	71.4	14.3	85.7	14.3	0.0	0.0	0.0
	기타	0.0	60.0	60.0	20.0	20.0	0.0	20.0
권역	중부	47.5	39.3	86.9	13.1	0.0	0.0	0.0
	동부	43.9	43.9	87.8	8.5	3.7	0.0	3.7
	서부	52.8	32.1	84.9	9.4	5.7	0.0	5.7
	남부	44.2	39.5	83.7	14.0	0.0	2.3	2.3

3. 서울지역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 효율성

다른 종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신용보증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69.5%가 ‘효율적’ 이라 답하였다. 기업 규모별 응답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업종별로는 운수업(100%)과 기타업종(80.0%)이 느끼는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29.1%) 및 음식숙박업(28.6%)의 경우, 10개 업체 중 약 3곳 가량이 ‘보통’ 또는 ‘비효율적’ 이라 생각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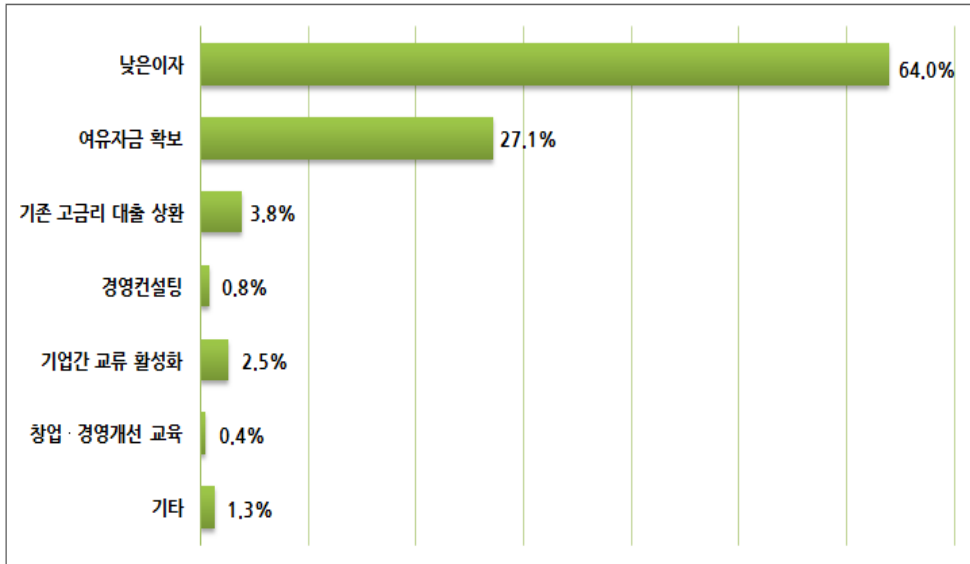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동부지역(74.1%)에 위치한 사업체의 긍정적 평가 정도가 높았던 반면, 중부지역(62.9%)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신용보증 운용의 효율성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동, 종로 일대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이 운집한 중부지역 특성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림 7]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 효율성

4.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편익

공적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자금차입 시 담보문제 해결을 제외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편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4.0%가 ‘낮은 이자로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 짐’을 꼽았다.



[그림 8]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편익

이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통한 장가저리의 정책자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십분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유자금 확보 가능(27.1%)’,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이 가능해 짐(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통해 주로 금융부문의 애로 해결에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이 가능해 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경영컨설팅을 통해 얻은 편익 역시 소상공인 규모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금년 2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정책에 대해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창조경제 구현’ 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실제 영위중인 업종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분야이기 보다는 ‘생활형 자영업’ 관련 업종이 대부분임을 생각할 때, 창조경제 정책 비전이 이들의 사업영역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풀뿌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상황을 고려한 ‘기업규모별 창조경제 실행방안’ 이 세분화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뒤, 주요정책별 성과실현 가능 정도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금융부문의 애로해소’ 와 관련된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증산층 70% 구현’ 같이 정책의 성공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장밋빛 구호’ 에 가까운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경제부흥에 대한 막연한 기대형성 노력보다는 ‘현장 중심적이고 실제 운용 가능한 영역의 정책’ 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밖에 ‘공약실천 의지’ 및 ‘소통 강화’ 등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우선순위로 꼽혔다.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확대’ 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위의 조사항목에서 현장과의 ‘소통 강화’ 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의 하나로 지목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 지원체제(기관) 세분화 또는 일원화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세분화(26.4%) > 일원화(18.6%)’ 로 나타나, 통합지원 체제 보다는 각 기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요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보다는 중기업 규모에서 세분화 요구가 다소 더 높았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의 기업규모별 구분체계를 ‘중견·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새롭게 재편할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기업은 ‘자생력 제고 방안’ 을 꼽은 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보호책 마련’ 이 중요하다 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요구의 상이함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관점의 전환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영세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 보호를 통한 기반구축 지원’ 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능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지원’ 을 통해 ‘기업규모별 맞춤형 성장사다리’ 정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경영상황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규모(매출)와 채산성(순이익)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음식숙박 및 도소매와 같은 생활형 자영업 부문의 경영악화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거시적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해당 부문에 대한 미시적 맞춤형 정책지원이 신속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애로’ 와 ‘매출감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 기관이 실시한 최근의 경영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하다.³⁾ 각 항목별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보다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의 절대 다수(96.2%)는 최근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 사업체 운용에 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조사응답 기업 대부분이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 을 자구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종이 속한 시장의 새로운 유효수요 창출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고객확보를 위한 출혈경쟁 심화로 추가 고통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책을 넘어서서 신시장 개척, 새로운 구매자 연결제도의 마련 등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신규 유효수요 창출 경제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복수응답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중견기업(13.5월)	내수부진(46.2%)	제품가격 하락(31.7%)	환율변동(27.9%)
중소기업(13.3월)	판매부진(29.9%)	환율·가격변동(28.2%)	자금조달(17.6%)
소상공인(13.3월)	판매부진(33.0%)	과당경쟁(19.1%)	대기업 진출(17.5%)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1%와 47.9%가 각각 매출증대 및 고용증가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영업활성화(매출신장)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보증의 고용창출 효과는 기업체 부도예방에 따른 ‘고용유지’ 개념까지 연계하여 고려될 경우 이에 평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64.0%는 ‘낮은 이자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가장 큰 편익으로 꼽고 있었다. 이는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장가저리 정책자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십분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